

## 〈발표2〉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

오정근(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

### I. 서론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획일화된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중심의 지방분권체제가 형성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시설 및 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지역사회 단위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모델을 설계하도록 하는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sup>1)</sup>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그 시행에 관한 연구(김영모, 2006; 김성이, 2006; 이영철, 2006; 송정부, 2006)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된 연구(김현진, 2006; 정무성, 2006; 표갑수, 2006; 박태영, 2007)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수립과정에 나타난 시행과제와 문제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6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를 위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내용들이었으며, 특정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접근이었다.(김현진, 2006) 그러나 2007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2006년 3월부터 전남 구례군, 곡성군, 무안군, 고흥군 등 4개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을 연구하였다.

1) 김현진(200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부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법적근거와 이론적 고찰, 국내외 지역사회복지계획 선행사례 그리고 관계 법령, 단행본, 학술지,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정부정책 발간물,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자료, 용역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전남 17개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현황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본 연구자가 참여했던 4개 군의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얻은 경험사례와 그 외 13개 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례를 비교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2)</sup>에서 검색하였으며,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취합하여 종합한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sup>3)</sup>의 2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의 문제점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전남 17개 군이라는 공간적 제한과 2007~2010년의 계획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III.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현황과 문제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본 연구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전남 무안군, 구례군, 곡성군, 고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포함한 17개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틀은 계획의 수립주체, 계획수립 시기와 기간, 목차영역, 욕구조사 대상, 항목과 조사방법, 욕구조사의 내용, 사업부문 및 우선순위 등 8개 사항을 분석하였다.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현황

#### 1) 계획 수립주체

사회복지 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 1>에서보는 바와 같이 전남은 17개 군 가운데 15개 군은 욕구조사와 사업계획수립을 외부용역에 의존하였으며, 영광군과 장성군만이 지자체에서 욕구조사와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였다.

<표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주체 현황

구 분	전남(17개 군)	전국 시·군·구(%)	비 고
외부용역	15( 88.2%)	211(90.9%)	용역기관
자체수립	2( 11.8%)	15(6.5%)	지자체자체, 지역복지협의체
기타	.	6(2.6%)	
계	17(100.0%)	232(100.0%)	

출처; 박태영(2007)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자료, 제작성

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

3) 전라남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6),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인식 및 계획수립의 경험 부족으로 계획수립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게 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가 있었던 것이 계획수립을 외부용역 기관에 의뢰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획서 제출이 완료된 후 지역의 계획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시한 것(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을 보면 전남 17개 군에서도 특정 용역기관이 다수의 계획을 중복 수주하여 수립한 예로 계획의 충실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 2) 계획수립시기와 기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기와 중복이 되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등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었고, 선거후 지자체 단체장의 교체로 인해 군 시책의 변화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의 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전국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 234개 가운데 28개 시·군·구(12%) (경실련 2006) 만이 구성되어 결국 계획수립기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시·군·구의 경우 1년 정도의 계획수립기간이 필요하지만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 실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목차 영역

보건복지부(2006)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매뉴얼」에 의하면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목차영역을 취합하도록 권장하고 목차영역의 구성요소는 총론, 지역사회현황, 관련계획검토, 비전 및 방향, 부문별 사업계획, 지역여건 조성계획, 행·재정계획, 평가 및 향후과제 등으로 되어있다. 전반적으로 17개 군 모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차영역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켜지지 않은 목차항목은 '관련계획 검토'로서 7개 군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이나 지자체의 자체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

## 4) 욕구조사 대상과 항목

욕구조사의 대상은 17개 군 모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외에 6개 군은 여론 주도층, 1개 군은 지역전문가, 1개 군은 공무원 등을 대상 집단으로 추가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욕구조사항목에 있어서는 시·군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일반주민(또는 성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기초수급자 등의 욕구를 조사한 경우가 있다. 욕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족 관련 욕구, 주거 관련 욕구, 건강 관련 욕구, 복지 관련 욕구, 복지 관련 이용도 및 만족도, 여가·문화 관련 욕구 등을 조사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을 환경측면과 복지욕구로 양분하여, 환경측면에서 지역사회, 생활환경, 여가활동, 청소년문제, 보건의료, 경제활동에 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복지욕구 측면에서 복지서비스, 자원봉사,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부문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군도 있었다.

## 5) 욕구조사의 방법

욕구조사 방법은 17개 군 모두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외에 전문가집단 면접을 실시한 경우가 1개 군, 전화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군이 1개 군 있었다.

#### 6) 욕구조사 분석결과

전남 17개 군의 욕구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4)</sup>

첫째,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등 3개 군은 생산 및 물류 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해 주변도시와 연계된 광역 도시권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인근 교육기관이 많아 교육열이 강하고 자녀들의 방과 후 지도 및 청소년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고, 곡성군과 구례군의 관광 벨트화가 기대된다. 이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인일자리, 노인건강, 노인여가 등의 욕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의 6개 군은 해양권역에 해당하며 매우 다양한 욕구가 있다. 경제문제, 건강문제,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지역은 주요 대도시 생활권과 소외된 권역으로 방문간호,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등 노인의 건강증진 욕구가 높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크고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서비스 선호와 함께 방과 후 학습지도와 보호, 취미기능교실 등 아동·청소년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나주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은 도시벨트로서 시군별로 욕구의 다양성 및 수준의 차이가 많아 유형화 곤란하다. 대체로 노인건강관리 욕구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7) 사업부분 및 우선순위

17개 군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부분은 명칭 및 부분의 수에 있어서 군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분은 크게 보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복지증진, 자활사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보육사업, 보건의료부분, 보건·복지 연계사업, 지역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 국제 결혼가정 복지, 자원봉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부분의 수는 군별로 최저 5개 부문에서 최대 8개 부문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7개의 사업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11개 군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제 결혼가정 복지는 5개 군에서 사업부분에 포함시켰으며 그 명칭은 국제 결혼가정 복지(3), 결혼 이민자가정(1), 소수자부문복지(1) 등이었다. 또, 자원봉사는 2개 군에서 자원봉사활동(1), 자원봉사 및 민간참여분야(1)로 사업부분에 포함시켰다. 군 별 사업부분 우선순위는 지역복지 주요 사업부분 중 노인복지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문제점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첫째, 계획수립 주체의 설정에 있어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계획의 주체는 2005년 지침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주체가 자치단체장일 때 지방정부 단위의 관주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계획들의 구성과 범위를 보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주민이 아닌 사회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업부분과 중점과제, 단위시책들을 구성한 사례가 많았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 집행체계로서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경험부족과 수립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역복지

4) 전라남도·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6),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작성

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참여가 부족했다. 넷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의 차별화에 대하여 광역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단순 취합·종합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분명한 차별이 별로 없었다.<sup>5)</sup>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내용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수립내용의 한계성 문제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복지와 보건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방복지행정계획의 수준을 넘어서 못하고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복지수요와 공급에 따른 중점 시책과 추진과제를 재정리한 사례가 많았다. 둘째, 지역특성의 반영의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외국인 이주가정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내용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셋째,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으로는 광역 및 중앙정부정책과 광역 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방향과 연계하는 종합 계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등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대부분 누락되었다. 넷째, 시·군 별로 욕구조사의 조사항목이 다양하여 욕구조사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사업부문 선정이나 중점과제 선정, 단위시책의 선정 또한 다양하고 그 명칭도 다양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자체 간의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문제이다. 계획수립의 내용에 있어서 인력, 조직, 재정 등에 대한 복지자원의 조달 및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 IV.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개선방안

#####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의 개선방안

첫째, 계획수립 주체의 설정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계획방식에 있어서도 전문기관에 용역방식으로 의뢰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여 영역별로 분담하는 것이 좋다. 계획수립의 주체가 자치단체장일 때 지방정부 단위의 관주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획범위의 설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복지의 성격이 대상자 중심의 선별주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계획에서 다루어야 하는 범위를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생활관련 영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민생활지원<sup>6)</sup>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에 대하여 이번 계획수립에 있어 그 기간이 짧아 지역주민과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참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계획기간의 설정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순회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의식

5) 박태영(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 36.

6)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

을 향상시키고 주민에 의한 복지계획, 주민을 위한 복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제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넷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역특성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시·군·구 복지계획에 포함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즉, 기반조성사업이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시·군·구 복지계획 평가사업 등은 광역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상의 차별이 요구된다.

##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내용의 개선방안

첫째, 사회복지 사업법은 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복지와 보건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방 복지행정계획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수요와 공급에 따른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점과제와 추진시책을 재정리한 사례가 많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맞게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많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에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국제결혼가정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중점사업이나 과제로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는 지역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으로는 광역 및 중앙정책의 방향과 연계하는 종합 계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조, 민간시설이나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대부분 누락되었다. 앞으로 서비스 통합문제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 별로 욕구조사의 조사항목이 달라서 욕구조사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사업부문이나 중점과제 선정과 그 명칭이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조사의 척도와 통일된 사업과 과제의 명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것만으로는 계획수립이 쉽지 않으며, 시·군·구 계획수립이 거의 완료된 2006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매뉴얼」<sup>8)</sup>을 배포하여 시·군·구는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광역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역시 시·군·구 계획을 취합하여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계획수립의 내용에 있어서 인력, 조직, 재정 등에 대한 복지자원의 조달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지

7) '05.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

8) 보건복지부가 발주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매뉴얼

방정부에 복지서비스의 책임만을 전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의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정 체계의 미비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과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경제개발계획만 있었고 사회개발 또는 사회복지계획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행정 시책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역사회단위의 종합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근래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이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다양한 지역복지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에 전국 시·군·구에서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지연과 2007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수립기간이 부족했고,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과거 행정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

2006년에 수립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의 주체가 대부분 외부용역기관에 의해 수립된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계획의 성격에 맞게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전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대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를 과거처럼 사회복지대상자와 복지와 보건·의료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보육, 주거, 고용,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나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수립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차기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이 먼저 개발 보급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내용은 달라도 틀은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척도로서 표준화된 설문지(필수항목, 선택항목 포함)도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2005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의 기관, 시설·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복지관련 주체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가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실천에 대한 역할정립과 기능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확립과 재정적 지원,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 구축과 재정지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공급과 교육담당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매년 시행되고 있는 년차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에 설정된 단위사업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실시여부와 성과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도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여 계획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광주·전남발전연구원·전라남도(2006),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권덕철(200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 2005년 지역사회복지계획실무과정, 보건복지부.
- 김성이(2006), “참여복지형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델”, 광주·전남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김영모(2006),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제와 방향”, 한국지역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집
- 김헌진(200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부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점검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0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태영(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집.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http://www.welfare.go.kr>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07), 「지역복지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발전연구」
- 송정부(2006), “한국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광주·전남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광주사회복지사협회.
- 안혜영(200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실천방안 과제”, 2006 제1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과정,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오오하시 켄사쿠(2006), 「지역복지계획과 community social work」, 광주·전남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 부록. 광주사회복지사협회.
- 이영철(2006), “한국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광주·전남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 광주사회복지사협회.
- 이재완(200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집.
- 전광현(2007), “주민참가와 지역복지계획, 네트워크로서의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체.
- 정무성(2006),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사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집.
- 표갑수(2006), “군단위형 지역사회복지계획”,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집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6),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7), 「참여정부의 지역사회복지 평가(성과와 과제)」